202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관련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문화재청 소관)

2022.12.

문화재청

- 목 차 -

【문화재청 소관 : 76건】

<문화재청> (52건)

1. 통합적이고 더욱 확대된 업무 대응을 위하여 국제교류 업무를 전담하는 직제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1
2. 검단신도시 사태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실시 및 책임자를 중징계할 것 ····· 1
3. 우리 고유문화, 예술 등에 관한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문화유산 창고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1
4. 국고보조사업 집행의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2
5. 국가보조금 실적보고서와 함께 정보공시 역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
6. 내부 징계를 받고 승진한 사람이 있었는지와 내부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을 승진 시킨 이유에 대해서 보고할 것 ····· 2
7. 최초 신고부터 징계완료까지 평균 153일이 걸리는 등 업무처리가 매우 늦었던 성 비위 사건의 신고부터 징계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 2
8.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
9. 성남 대장지구 관련 부분완료 건 중 98.5% 이상 부분완료 허가해준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와 이틀 만에 허가해준 건수를 보고할 것 ····· 2
10. 성남 대장지구 부분완료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비할 것 ····· 2
11. 곽상도 의원 아들이 문화재청을 통해 대장동 신도시에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고할 것 ·· 2
12.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택지개발 사업과정에서 문화재청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보고할 것 ····· 3
13. 문화재 사범 단속하는 전문인력도 확보하고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 줄 것 ····· 3
14. 문화재 사범단속의 수사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국회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 ····· 3
15. 문화재 도난·훼손 예방활동을 위한 사범단속인원(특사경)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3
16. 문화재 도난, 숭례문 화재, 사적지 무단침입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CCTV 설치를 확대할 것 ···· 3
17.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 ····· 3
18. 고미술품감정의 수요와 중요성을 감안해서 허위감정 등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
19.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4

20. 문화재 지정번호 운영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4
2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4
2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재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4
23. 문화재 드론방재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철저를 기할 것 ····· 4
24. 정조문화권 세계유산 및 정조대왕능행차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2021년 지표조사와 문헌조사 및 민간단체 결성, 2022년 발굴조사 등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 ····· 4
25. 문화재감정위원의 주거안정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4
26. 전국에 있는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가 전부 채용되고 배치될 수 있도록 현실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보고할 것 ····· 5
27.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후 계획이 있다면, 보고해주시고, 없다면 준비해주기 바라며, 단시간에 계획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보고할 것 ····· 5
28.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의 분기별・월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지원할 것 ····· 5
29. 국가재정 건전화로 일반회계 전입이 중단되고 2018년부터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응 방안과 상환계획을 제출할 것 ····· 5
30. 무형문화재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 ····· 5
31. 문화유산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존 정책의 핵심이므로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할 것 ····· 5
32. 비귀속 문화재 관리 및 활용 방안과 유물인수 기간을 한달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6
33. 황룡사탑 복원 과정에서 2007년 횡령사건으로 파면된 연구원이 어떻게 문화재청 복원사업에 참여 했는지 보고할 것 ····· 6
34. 문화재의 철저한 복원을 위해 남북 문화재 공동 연구 추진, 최대한 문화재 원형 보존을 토대로 복원 및 문화재청이 문화재 복원 사업을 철저히 파악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 ····· 6
35. 검단신도시와 김포 장릉을 거울삼아서 문화재 보호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며, 새로운 방식으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 6
36. 천연기념물 진돗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7
37. 허준 묘가 민통선 안에 있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하여 국방부와 협의할 것 ····· 7
38. 세종대왕 탄신기념관 기념관을 지어서 유네스코 문맹퇴치상인 세종대왕상도 국제적으로 선양을 하고 한글과 우리의 천문 과학기술을 알리는 역사적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7
39. 풍납토성 복원 관련 대책을 보고할 것 ····· 7
40. 궁능 및 박물관 등 문화재 관련 기관에 숨겨진 문화유산의 발굴 및 가치평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8

41. 창덕궁이나 박물관 등에 연구나 조사가 미흡하여 아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숨겨진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 등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고할 것 ····· 8
42.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복원공사 관련, 문화재청이 예산을 정밀하게 책정하지 못하고 업체 변경 등이 발생한 것은 문제이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 할 것 ·· 8
43. 문화재 관리를 위탁과 외주에만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효과적인 체계가 없는지 등 문화재 관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 8
44. 천연기념물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보호를 위해 부산시,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9
45. 전통공예품을 발굴하고 목록화해서 외빈 선물이나 국제행사 참가 기념품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 의무 구매제도를 적극 추진할 것 ····· 9
46. 4.19 의거를 촉발하게 하는 계기가 된 3.15 마산 의거를 기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와 발굴을 할 것 ····· 9
47. 대한민국 처음으로 19세기 말에 개항한 인천, 군산, 목포, 마산의 근대유산을 많이 발굴·보존하여 해당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 9
48. 우리 문화재를 국민들이 편리하고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향유 방식을 대폭 늘릴 것 ····· 9
49. 문화재 등록권고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0
50.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작업과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사업의 차이는 알겠지만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팀 사이에 소통을 하여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세심히 관리해줄 것 ····· 10
51.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시에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10
52. 가야사 복원과 관련해 사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많은 반발이 있음을 인지하고 시민단체와 사학계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할 것 ····· 10

< 국립문화재연구원 > (4건)

1. 지방 문화재연구소의 수장고 관리를 위한 인력확보 및 유물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마련하여 보고할 것 ····· 11
2.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원에서 추진가능한 실용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것 ····· 11
3.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 포함)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한 통합 유물관리시스템이 미흡하며 관리인력 또한 충분치 못한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 11
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승격·직제 확대개편 및 인력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 11

< 국립고궁박물관 >　(1건)

1. 고궁박물관 설치 목적과 관계가 없는 도서들이 구입된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보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2

< 궁능유적본부 >　(18건)

1. 무슨 연유에서 종묘와 창덕궁 창경궁 사이가 끊어졌는지, 민족정기가 말살됐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이 담긴 안내 표시판(영어, 일본, 중국어 포함)을 설치할 것 ····· 12
2. 종묘 외곽 담장에 새겨진 일본식 연호의 의미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12
3. 종묘 외곽 담장에 일본식 연호 각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안내판 조치 계획을 보고할 것 ····· 12
4. 덕수궁돌담길에 주한 미국대사관저 경호를 위해 경찰버스를 포함한 차량 5대가 배치되어 인도를 이용하기 매우 불편한 상황을 파악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12
5. 궁궐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수가 없음.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관람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12
6. 궁능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홍보된 것과 다르게 시각 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점검할 것 ····· 12
7. 스마트폰과 장애인용 음성해설기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13
8. 문화재와 편의시설을 이어주는 매개시설 등 장애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유산의 특수한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보편적 관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 ····· 13
9. 장애인, 노인 등 보행이 불편한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게 시행되는 문화유산 관람서비스의 내실있는 사업진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13
10. 검단신도시 사태 관련 원칙대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보고할 것 ····· 13
11. 검단신도시 사태 관련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할 것 ····· 13
12. 검단신도시 사태의 경관 훼손은 사태의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 그리고 유네스코 지적에 대비한 대응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할 것 ····· 14
13. 검단신도시 사태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차원에서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보완해 유사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함. 이후 진행과정을 보고할 것 ···· 14
14. 서울 태릉을 비롯한 조선왕릉 40기에 대한 완충구역의 적절한 보존지침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고할 것 ····· 14
15. 태릉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청와대 등 관련 기관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 판단해서 상임위에도 보고를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 14
16. 2017년도 현상변경 허가 기준 변경 고시 당시에 문화재청장, 관련 국장, 담당부서 직원들 명단과 그때 관계를 보고할 것 ····· 14
17. 한국사격진흥회와 김정민 씨의 체납된 변상금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보고할 것 ····· 15

18. 2015년에 작성된 용역보고서 ‘조선왕릉 복원계획’사본 제출할 것 ····· 15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1건)

1. 국외 소재 문화재의 기증 등 다양한 자발적 환수를 유도할 수 있는 환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16

【문화재청】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문화재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 통합적이고 더욱 확대된 업무 대응을 위하여 국제교류 업무를 전담하는 직제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2022년 정기직제 반영 : 국제협력 및 교류기능 전담 인력 - 반영인원 : 2명(5급1, 6급1) - 배정계획 : '22년 3분기 ○ 행정안전부에 조직 확대 요구('22.3월) - 1국(문화유산국제협력관) 1과(세계유산통합관리과) 신설 및 15명 증원 요구 ○ 문화유산 국제교류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추진
2. 검단신도시 사태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실시 및 책임자를 중징계할 것	**<조치사항> 완료** ○ 감사원 감사 실시('22.4.18. ~ 5.10.) - 문화재청 정기감사 시 검단신도시(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공사 현상변경 관련하여 소송 및 수사 중에 있어 감사대상에서 제외
3. 우리 고유문화, 예술 등에 관한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문화유산 창고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완료** ○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 사진 확충·개방사업 추진 -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재공공저작물 디지털전환 구축사업을 통해 문화재 사진 7,680건 확충(신규촬영 7000, 아날로그 사진 복원 680) - 2022년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개선(문화재 데이터 품질개선) 사업으로 고품질의 문화재 사진 선정 품질점검 후 등록·개방(10,178건) ※ 공공누리 1유형의 사진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게임업체 등과 문화유산 3D 데이터 활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22.4.29.) - 게임을 통한 문화유산 콘텐츠 보급 확산을 위해 ㈜펄어비스와 업무 협약 체결 ○ 2022년 제1회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경진대회 주최('22.3.~6.) **<향후계획>** ○ 고품질 문화재 사진 신규촬영 및 수집·개방 지속추진('23년~) ○ 문화유산 콘텐츠 원천자료 개방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23.1월)
4. 국고보조사업 집행의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5. 국가보조금 실적보고서와 함께 정보공시 역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완료** ○ 보조사업 부서에서 법정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및 정보공시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 '21년 보조사업 정보공시 기한 준수 독려 *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정보공시 기한 준수 철저(공문.'21.12.20.) * e나라도움을 통한 2021회계연도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안내(공문,'22.1.20.) * e나라도움 보조사업 정보공시 재안내(공문,'22.4.21.)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후속조치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공문,'22.5.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6. 내부 징계를 받고 승진한 사람이 있었는지와 내부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을 승진시킨 이유에 대해서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의원실 보고 완료(21.10.15.) ○ 보고내용 - '주의', '경고' 처분은 「공무원임용령공무원」 제32조에 규정된 승진 제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사례는 있음 - ○○○과장이 받은 처분은 '주의'로서 승진 결격사유는 아니었고, 승진후보자 중 경력과 실적심사평가 등을 반영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임
7. 최초 신고부터 징계완료까지 평균 153일이 걸리는 등 업무처리가 매우 늦었던 성 비위 사건의 신고부터 징계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조치사항> 완료** ○ 「문화재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개정('21.12.22.) - 고충심의위원회 및 징계의결요구 등 명확한 처리기한 명시 ○ 「문화재청 인사운영 규정」 개정 : ('21.12.22.) -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 규정 마련
8.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우리 군부대 내 지표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확인된 문화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안내판 설치 등 문화재 보호활동 추진 - ('21) 우리군(58개소/1,032㎡), 주한미군(5개소/56㎡) 지표조사 완료 및 안내판 설치(22개소) 등 ○ 문화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교육 사업 실시 - 군부대 내 매장문화재 이해 등 18차시 온라인 교육과정 신설 및 배포 ○ 2022년도 군부대 모니터링 사업 내 사격장 73개소에 대한 조사 및 안내판 설치 추진 중(2022. 4. 4.~)
9. 성남 대장지구 관련 부분완료 건 중 98.5% 이상 부분완료 허가해준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와 이틀 만에 허가해준 건수를 보고할 것 10. 성남 대장지구 부분완료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비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의원실 대면 보고완료('21.10.14.)
11. 곽상도 의원 아들이 문화재청을 통해 대장동 신도시에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대장동과 관련된 문화재청, 조사기관, 관계전문가에 대한 외압은 확인되지 않음'으로 의원실 보고완료('21.10.14)
12.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문화재영향평가제도 설계연구 추진('21. 2.~12.) - 발주처 : 보존정책과/ 수행기관 :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향후 추진계획>** ○ 문화재영향평가제도 설계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영향진단법 제정 추진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3. 문화재 사범 단속하는 전문인력도 확보하고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 줄 것	**<조치사항> 완료** ○ '23년 경찰청 전문수사관 협업정원을 위해 협업이음터 추진 2명 ○ 기재부에 특정업무경비 증액 요청('21.11. 미반영) ○ '23년도 특정업무 경비 예산 증액 요청(5백만원 → 1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 현저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14. 문화재 사범단속의 수사력 강화를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경력관을 증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국회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	**<조치사항> 완료** ○ '23년 전문수사관 인력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협업정원 협의 **<향후 추진계획>** ○ 인력증원 및 예산 증액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15. 문화재 도난·훼손 예방활동을 위한 사범단속인원(특사경)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문화재청 산하 지방(해양)문화재연구소 특사경 지명(9명) 확대('21.7.~'21.11.) - 각 지방연구소 관할 발굴현장 사건의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 구축 ○ '23년 소요정원요구(2명) 반영 요청 **<향후계획>** ○ 인력증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16. 문화재 도난, 숭례문 화재, 사적지 무단침입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CCTV 설치를 확대할 것	**<조치사항> 완료** ○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인 방범시설 설치로 초동대응 체계 확립 - '17년(38개소), '18년(88개소), '19년(38개소), '20년(49개소), '21년(24개소) 등 최근 5년간 총 237개소 현재 설치완료 ○ '23년도 문화재 방법(CCTV 등)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요구(4월) **<향후계획>** ○ 설치대상 확대, 시스템의 고도화 및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
17.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	**<조치사항> 완료** ○ 경찰과 공조수사('22.2.~5.) 및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 실시('22.5.) **<향후 추진계획>** ○ 훈민정음 상주본의 은닉장소 특정 시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집행 지속 실시
18. 고미술품감정의 수요와 중요성을 감안해서 허위감정 등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완료** ○ 감정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시행 - 한국고미술협회 정관 및 감정규정 개정('22.4) -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업무 제도개선 및 유의사항 알림('22.6. 공문시행)
19.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완료** ○ 문화재관람료 민간부문 감면 비용 지원 문화재보호법 개정·공포('22.5.3.) - 문화재관람 국민불편 해소 및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2.9.5.~10.17) **<향후계획>** ○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위한 대통령령 개정 추진(~23.3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0. 문화재 지정번호 운영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종합계획 수립, 의원실 보고 완료('21.10.18.) - 제도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및 홍보 강화 등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 및 대외 알림('21.11.19) ○ 문화재청 소속·산하기관 지정번호 개선 자체계획 수립 완료('21.11월~12월)
2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재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서면보고('21. 10. 19./김예지 의원) - 지자체 대상 교육 및 소통·협력, 역량진단 추진 방안 ○ 지자체 문화재 관리의 전문성·현장성 확보를 위해, 문화재 전문인력 의무 배치 근거 마련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통과 노력 지속 - 법안발의 현황 : 이상헌의원('21.6.10.), 김예지의원('21.9.30.), 김의겸의원(21.10.5.)
23. 문화재 드론방재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철저를 기할 것	**<조치사항> 완료** ○ 문화재 예찰활동 및 실시간 모니터링 위한 방재드론 설치 - '21년(7개소), '22년(4개소) 등 드론 구축 예산 지원 ○ 실효성 극대화 위한 경상적 유지관리 예산요구(4월) ○ 문화재 방재드론 사업 지침 및 가이드라인 배포(4월) ○ 문화재 방재드론 사업추진 및 드론의 운영현황 점검(매월) ○ 문화재 방재드론 전문가 TF 구성·운영(5월) - 현지조사 1차(5월, 경주), 2차(7월, 동해), 3차(10월, 성주), 4차(12월, 부안) ○ 문화재 방재드론 사업 실효성 극대화 위한 실무자 회의 개최(6월) **<향후계획>** ○ 방재드론 및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경상경비 지원('23년) ○ '23년 문화재 방재드론 전문가 TF구성 운영('23.3월~12월)
24. 지난 국감에서 제시한 정조문화권 세계유산 및 정조대왕능행차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2021년 지표조사와 문헌조사 및 민간단체 결성, 2022년 발굴조사 등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	**<향후 추진계획> 완료** ○ 정조유산 관련 지자체(경기도, 수원시, 오산시)에서 잠정목록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 등 절차가 진행 중임
25. 문화재감정위원의 주거안정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공항·항만 등 감정관실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직원 관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23년도 예산 요청(51백만원) - 기재부, 23년도 정부 예산 증액(36백만원) 미반영 **<향후계획>** ○ 예산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6. 전국에 있는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가 전부 채용되고 배치될 수 있도록 현실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전부 배치 관련 방안 의원실 보고 완료('21.11.3, 무형과) ○ 문화예술교육사 처우 개선 및 채용확대를 위한 중장기방안 연구 추진(23년 연구용역비 예산확보, '22년 7월) **<향후 추진계획>** ○ 문화예술교육사 처우 개선 및 채용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23)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확대 및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 증액 등 기재부 지속 협의
27.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후, 어떻게 하겠다는 추후 계획이 없다면, 전수조사의 의미가 반감될 것임. 이미 전수조사 후 계획이 있다면, 보고해주시고, 없다면 준비해주기 바라며, 단시간에 계획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역사문화자원 체계적 관리 방안 서면 보고('21.12./유정주 의원)) - 1, 2차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22. 5월) -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지속(~24년) 및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22년) * 향토유산 표준조례(안) 및 법안 가이드라인 수립 등
28.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의 분기별·월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지원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월별 집행현황 점검, 분기별 현장 점검 및 사전설계비 선지급을 통한 사업지원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집행관리를 위한「지역전담제」계획 수립(4월) 및 담당자별 월별·분기별(4회) 집행현황, 집행부진사유 점검 - 사업신청시 설계비와 시공비를 연차별로 분리 지원하여 사업비 이월 최소화 ○ '23년 문화재 재난방지시설구추사업 신청서 검토과정에서 연차별 사업에 대한 사전설계비 우선 반영(9월) ○ 2022 지역전담제 집행점검 최종 결과 보고(12월)
29. 문화재보호기금 수입현황을 보면 국가재정 건전화로 일반회계 전입이 중단되고 2018년부터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예수금 증가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응 방안과 상환계획을 제출할 것	**<조치사항> 완료** ○ 문화재보호기금 재정건전화를 위한 향후 대응방안 서면보고('21.10.) - 자체수입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및 용역추진 현황 - 일반회계 전입금 재도입 및 일부사업 일반회계 이관 추진 등
30. 무형문화재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월정전승지원금 지원 인상('23년 예산안 736백만원 증액) - 전승교육사 역할 강화에 따른 월정지원금 인상(75만원→90만원) - 전승자 유입 촉진을 위한 전수생 장학금 인상(27.5만원→30만원)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충원 확대(보유자 7명·전승교육사 13명 증가)
31. 문화유산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존정책의 핵심이므로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완료** ○ 2022년 전승공동체 육성지원 신규사업 예산 설명회(22.1월/ 2회) ○ 전승공동체 신규사업 2023년 예산 편성 요구(22.4월) ○ 전승공동체 활성화 사업 2023년 예산(정부안_16억) 반영(22.8월) ○ 전승공동체 종목 지원을 위한 공모·선정('22.12~'23.1월) - 아리랑 등 15개 종목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23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2. 비귀속 문화재 관리 및 활용 방안과 유물인수 기간을 한달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폐터널을 활용한 비귀속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조성 사업 추진 -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및 설계('21.6～12) -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조성 공사(대전, 전주) 실시 ○ 유물인수는 조사기관 및 보관관리기관의 여건(인력, 관리시설현황 등)에 따라 협의를 거쳐 이관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인수기간 단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조성 공사(대전, 전주) 완공('22.9.) ○ 조사기관 유물 이관 및 전시관 개관('22.10.～'22.12.)
33. 황룡사탑 복원 과정에서 2007년 횡령 사건으로 파면되었던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의 연구 발제자 참여가 확인되었음. 횡령사건으로 파면된 연구원이 어떻게 문화재청 복원사업에 참여 했는지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의원실 보고 완료 ('21.11.2) - 국립문화재연구소 별정 6급으로 근무하였던 양○○은 2003년 5월 직권면직 되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한 2006년 12월과 2012년 2월 황룡사 복원정비연구와 관련한 공청회 및 포럼에서 발표한 사실이 있음 - 앞으로 연구수행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살펴 유사사례 방지 등 내실있는 연구 진행토록 노력
34. 문화재의 철저한 복원을 위해 남북 문화재 공동 연구 추진, 최대한 문화재 원형 보존을 토대로 복원 및 문화재청이 문화재 복원 사업을 철저히 파악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의원실 보고 완료 ('21.11.2) -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을 위한 전문 자문위원단 구성 운영 - 풍부한 사례조사 및 폭넓은 학술대회를 통한 다양한 연구 성과 제시 -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불일사 금동9층탑 등 북한문화재 공동연구 검토 - 황룡사지 9층 목탑 복원은 고증 연구, 설계, 시공 등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그 성격상 문화재청 관련 연구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경주시 등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 사항으로 향후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는 복원·정비를 위해 적극 노력
35. 검단신도시와 김포 장릉을 거울삼아서 문화재 보호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며, 새로운 방식으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개선 마련, 의원실 보고완료('21.10.13.) ○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 연계완료('22.3., 국토부 토지이음 - 문화재청 GIS) ○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적정성 지속실시('22년/2차년도, 서울 등 378건) ○ 문화재 영향진단법 제정 추진('법령 제정안 발의 중) ○ 문화재 돌봄사업과 연계하여 무허가 현상변경 점검 실시('22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6. 천연기념물 진돗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정(문화재청 훈령 제595호, 2022.3.21.) - 진도개 보존·관리계획에 등록견 등 보호·관리방안 포함, 등록 사육두수 조정 (진도개 4,000두→500두, 동경이300두→200두, 삽살개 200두→ 변동없음) - 소유자 의무신고 지속적 교육·안내 및 관리단체 폐사체 인수·직접처리 등 - 미등록견 및 진도개 외의 개 반입·반출 조건 완화를 통한 동물복지 향상 ○ 진도개 보호 및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농림부, 진도군 등 관계부처 협의('21.10.15., '22.3.23) **<향후 추진계획>** ○ 진도개 보호 관리계획(개체수, 사육현황 등) 지속적 모니터링 등
37. 허준 묘가 민통선 안에 있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하여 국방부와 협의할 것	**<조치사항> 완료** ○ 관련사항 의원실 구두협의('21.10.) ○ 파주시와 군부대(1사단장)과의 지속적 협의 독려('21.10월/파주시) - 2023년 「허준묘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한「허준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예정으로 관람객 접근이 용이한 방법을 제안 예정(파주시→군부대) * 허준묘(경기도 시도기념물, '92.6. 지정)
38. 문화재청이 세종대왕 탄신기념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기념관을 지어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유네스코 문맹퇴치상인 세종대왕상도 국제적으로 선양을 하고 또 한글과 우리의 천문 과학기술을 알리는 역사적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세종대왕 생가터 고증조사 용역(2021.7./서울시) - 현 국방부 국유지인 군인아파트(옥인동 45-1번지 일대)를 유력한 곳으로 추정하였음 - 시굴조사, 지하물리탐사 등 통해 추가 확인 필요하나 군관사로 사용중으로 후속조사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함 ○ 생가추정지 현장조사, 관할 지자체와 기념관 건립 필요성 협의('21.10.19.) ○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기념관 건립 직접 추진은 어려우며, 서울시·종로구에서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의
39. 풍납토성 복원 관련 대책을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삼표레미콘 철거 부지 정비, 창의마을 활용 위한 추진협의체 운영 - 기관 :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 강화문화재연구소, 자문위원 - 일자 : 3회('21.8.31. / 9.14. / 10.14.)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자문단 운영 - 기관 : 문화재청, 서울시, 강화문화재연구소, 문화재(전문)위원 - 일자 : 4회('21.7.7. / 9.8. / 10.13. / '22.3.30.) ○ 삼표 반환부지 시굴조사('21.12.8./7일간), 조사결과 언론공개('22.01.04.) **<향후 추진계획>** ○ 삼표 관련 공유재산 인도소송 등 소송 4건 진행(서울시·송파구)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22년) / 사업추진('23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0. 궁능 및 박물관 등 문화재 관련 기관에 숨겨진 문화유산의 발굴 및 가치 평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41. 창덕궁뿐만 아니라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또는 많은 문화재 관련 연구소, 박물관에 연구나 조사가 미흡하여 아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숨겨진 문화재가 더 있을지 모르니 전수조사를 포함하여 앞으로 이런 유산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아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지정 동산문화재에 대해 주요 문화재별 전수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가치 발굴 및 보존을 위해 계획 수립, 진행 중('22.1월~) *대상: 국립박물관 소장 비지정문화재/ 전국 사찰소재 불단(佛壇) 및 대형불화 ○ 조치경과('22.1~12월) - 국립박물관 소장 '앙부일구' 등 11건 보물 지정 -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불단', '서울 청룡사 삼신불 괘불도' 등 35점 정밀조사
42.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복원공사 관련, 문화재청이 예산을 정밀하게 책정하지 못하고 업체변경 등이 발생한 것은 문제이며,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중요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할 것	**<조치사항> 완료** ○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책정시 문화재수리 대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출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기준」에 근거하여 보수공사 공사비 책정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에 근거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대가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제정 - 해체후 훼손 정도 등 문화재 수리 방향 및 범위 확대·축소에 따라 공사금액 재책정 ○ 중요문화재 보수정비 시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기관에서 추진 - 대상 : 국보, 보물 등 문화재 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41조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등) 문화재 수리,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수행 가능 **<향후 추진계획>** ○ 국보·보물 등 중요문화재 국가기관 주도 수리 필요시 추진(매년) ○ 안동 조탑리 오층석탑 해체보수(보물 / '63. 1. 21. 지정) - 공사기간 : '22년~'26년 - 수행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국립문화재연구소 노하우 공유 등 협조체계 구축) *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심의 결정('21. 11.18.) - 공사 내용 : 석탑 해체보수
43. 문화재 관리를 위탁과 외주에만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해마다 반복되는 문화재 훼손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자체의 근접성과 문화재청의 전문성을 결합해 공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계가 없는지 등 문화재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완료** ○ 문화재 보존관리의 최일선인 지자체 문화재 담당인력의 전문성·현장성 강화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 추진 중 - 문화재 전문인력(학예직) 의무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속 노력 * 개정안 발의현황 : 이상헌의원('21.6월), 김예지의원('21.9월), 김의겸의원('21.10월) 대표발의 등 3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4. 천연기념물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보호를 위해 부산시,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완료** ○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 등을 통해 철새 도래기간 내 선박 운영 시 조류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속도조절 운행 조건 부여 등(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및 기수생태계 복원 모니터링) - 향후 기수생태계 복원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선박 운영 최소화 ○ 낙동강 철새도래지 내외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시 겨울철새 도래기간(11월~익년 3월) 공사 중지 조건제시를 통해 보존 강화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보존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공문 발송('22.4~)
45. 전통공예품을 발굴하고 목록화해서 외빈 선물이나 국제행사 참가 기념품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 의무 구매제도를 적극 추진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전승공예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승공예품 판매 및 대여 목록 점검 - 유관기관 및 무형유산원 전승공예품 판매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공예품 목록 점검(~21.12월) - 전승공예품은행 대여·활용 전승공예품 목록 현행화 ○ 전승공예품은행에서 기 목록화된 전승공예품에 대해 홍보책자 제작·배포 및 대여 협조 공문 등을 통해 지속 홍보 - 맞춤형 홍보 브로슈어, 전승공예품은행 홍보책자 제작 및 기관 홍보('22.7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21.11.9./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 제43조의(전승공예품 우선구매 등) 신설
46. 4.19 의거를 촉발하게 하는 계기가 된 3.15 마산 의거를 기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와 발굴을 할 것	**<조치사항> 완료** ○ 4·19혁명 참여자 조사서 등 3건 등록('20.8.12) **<향후계획>** ○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22년 경남 지역)에 따라 3.15 마산의거 관련 근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보존 추진
47. 대한민국 처음으로 19세기 말에 개항한 인천, 군산, 목포, 마산의 근대유산을 많이 발굴·보존하여 해당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완료** ○ 근대문화유산 발굴에 따른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 완료 - 군산('18년), 목포('18년), 창원 진해('21년) - 국고지원 추진('22년: 군산 4.9억, 목포 19억, 창원 2.5억) **<향후계획>** ○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22년 경남 지역)에 따라 마산지역 근대문화유산 발굴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보존 추진
48. 우리 문화재를 국민들이 편리하고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향유 방식을 대폭 늘릴 것	**<조치사항> 완료** ○ 민간협력을 통한 국민관심과 수요가 높은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지속 개발('22년 ~) ○ 디지털 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관람·체험·학습 할 수 있는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 건립 추진('22년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9. 문화재 등록권고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완료** ○ 등록권고 시 문화재 등록 혜택(세금감면, 수리비용 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공유나 국유의 경우 직권조사 확대,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등록의 실효성 향상 추진 ○ 지역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문화재의 경우 '19.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적극 활용하여 등록 추진
50.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작업과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사업의 차이는 알겠지만 겹쳐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임. 문화재청 내 다른 팀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팀 사이에 소통을 하여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세심히 관리해줄 것	**<조치사항> 완료** ○ 양 사업은 조사 목적 및 시기,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사업 대상이 중복 소지가 있어 사업 추진 시 부서 간 긴밀한 협조 및 소통 지속
51.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시에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52. 가야사 복원과 관련해 사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많은 반발이 있음을 인지하고 시민단체와 사학계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완료** ○ 문화재청은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지 않으며,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문' 용어를 '운봉고원 일대의 가야 정치체' 및 '기물·사문·기문'으로 표현한다는 의견을 유네스코에 제출('22.2월) ○ '다라' 용어를 '쌍책 지역 일대의 가야 정치체'로 표현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유네스코에 제출('22.4월)

【소속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원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 지방 문화재연구소의 수장고 관리를 위한 인력확보 및 유물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마련하여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통합관리시스템) 현재 운영 중인 '문화재 전자행정 협업업무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물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 * ('22년) 유물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완료 * ('23년) 유물정보통합관리체계 관리·운영 ○ (인력충원) 유물관리 전담 인력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적절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인원 증원 전이라도 현재 인원의 업무 재배치를 통해 유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2. 최근에 2019년부터 3년간 문화재 풍수해는 221건으로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연구소가 기후변화 관련해 실시한 관련 연구는 단 1건에 불과했었음. 문화재 연구 책임 운영기관으로서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소에서 추진가능한 실용적인 대비책을 종감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할 것	**<조치사항> 완료** ○ 풍수해 피해 예방 기술 개발 지속 추진 및 사용 확대 * 기와 탈락 예방 기술 검증 및 사용 확대, 담장 파손 및 도괴 예방 기술 적용 ○ 문화재 유형별 풍수해 피해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분석 실시(약 1,500건 /'22년 10월 기준) ○ 기후변화 및 풍수해 관련 연구과제, 보존관리 부서 협업을 통한 피해 예방 추진 *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재주변 해충, 식생 등 모니터링, 문화재영향성 연구 지속 추진 => '문화재 재해영향 분석 및 피해저감 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자연유산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22.9)
3. 유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최소한의 인프라임.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 포함)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한 통합 유물관리시스템이 미흡하며 관리인력 또한 충분치 못한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완료** ○ (통합관리시스템) 현재 운영 중인 '문화재 전자행정 협업업무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물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 * ('22년) 유물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완료 * ('23년) 유물정보통합관리체계 관리·운영 ○ (인력충원) 유물관리 전담 인력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적절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인원 증원 전이라도 현재 인원의 업무 재배치를 통해 유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승격·직제 확대 개편 및 인력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조치사항> 완료**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지역의 문화재 조사·연구 핵심 거점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2022년 수시직제 학예연구사 2명 확보(22.12월) - 2023년 정기직제로 직제 승격·확대 사항 제출('23.3월) - 직제 승격·확대를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음

< 국립고궁박물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 고궁박물관 설치 목적과 관계가 없는 도서들이 구입된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보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완료** ○ 박물관 설치목적과 맞지 않는 도서 111권 파악 후 해당도서 111권 등록 해지 완료('21.10.18.) ○ 도서 구입 최종 결재권자를 과장에서 관장으로 격상 완료, 구입 및 기증 도서 등록 전 간부회의 검토 후 등록하도록 개선 조치 ○ 의원실 서면 보고('21.10.7.) 및 대면 보고('21.10.18.) 완료

< 궁능유적본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 무슨 연유에서 종묘와 창덕궁 창경궁 사이가 끊어졌는지, 민족정기가 말살됐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이 담긴 안내 표시판(영어, 일본, 중국어 포함)을 설치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사업 주체인 서울시에서 율곡로 도로 구조개선사업 한글, 영어 안내판 설치 완료('22. 7월) ○ 서울시에서 율곡로 도로 구조개선사업 일어, 중국어 안내판 설치('22. 12월)
2. 종묘 외곽 담장에 새겨진 일본식 연호의 의미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3. 종묘 외곽 담장에 일본식 연호 각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안내판 조치 계획을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종묘 외곽담장 관련전문가 자문회의('21.12월) ○ 종묘 외곽담장 안내판 정비 관련 자문회의('22.2월, 3월) ○ 문화재청장 종묘 방문(안내판 개선 계획 점검)('22.4.15) ○ 종묘 외곽담장 안내판 문안 최종 검토회의('22.5.2) ○ 종묘 외곽담장 안내판 감수 및 제작('22.6월) ○ 종묘 외곽담장 안내판 설치('22.7.5)
4. 덕수궁돌담길에 주한 미국대사관저 경호를 위해 경찰버스를 포함한 차량 5대가 배치되어 인도를 이용하기 매우 불편한 상황을 파악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조치 완료('21.10.17.) - 배치차량 감축(6대→3대) - 혼잡시간대(07시~09시, 18~20시) 차량이동 - 보행자·차량 이동 증가 시간대에 안내 경찰관 배치 등 개선 조치 * 경찰 차량은 보행로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관광객 안전에 유의하여 주차
5. 궁궐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해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수가 없음.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관람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조치사항> 완료** ○ 궁궐 장애인 서비스 관련 포털사이트 안내 실태 파악 및 수정 요청 - 덕수궁 시각장애인서비스 등 네이버 플레이스에 장애인 편의시설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서비스 제공 오류사항에 대한 삭제 요청 - 다음, 구글 등은 오류사항 없음 확인
6. 궁능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홍보된 것과 다르게 시각 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점검하여 홍보가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자체 운영행사뿐 아니라 타 기관 협업행사에서도 장애인 서비스 관련 홍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점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7. 스마트폰과 장애인용 음성해설기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청각장애인 대상 궁능사적 24개소에 대한 수어해설 영상 제작 완료. ○ 궁능 수어해설 영상 QR코드 삽입한 리플렛 제작 완료
8. 문화재와 편의시설을 이어주는 매개시설 등 장애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특수한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장애인들의 보편적 관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장애인단체*, 문화재·편의시설 전문가, 일반국민 및 문화재청 담당 등으로 구성된「궁능 무장애공간 조성 민관협의체」를 지속 운영중('18년~) * 장애인단체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개발원 - ('21년)「궁능 무장애공간 조성 민관협의체」 자문실적 : 1회(기본계획 수립) - ('21년) 궁능 무장애공간 사업 시행중 장애당사자 등의 자문실적 : 6회(3개 사업) ○「궁능 무장애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공간별 사업 지속 추진 -「문화재 주변 시설들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개정('20.11.2.) 준수 - 궁능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 시 권고 및 의무 이행사항 준수('20.11.16.)
9. 장애인, 노인 등 보행이 불편한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게 시행되는 문화유산관람서비스의 내실있는 사업진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전국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사를 통한 궁궐 간접 체험 기회 제공('21. 11월 / 20개 기관, 662명) - 달빛기행, 별빛야행 키트 체험 및 VR(고화질)영상 관람, 기념품 제공 등 ○ 전국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궁궐 체험 프로그램 진행('21. 12월 / 15개 기관, 508명 대상) - 달빛기행 키트 체험 및 VR(고화질)영상 관람 등 ○ ('22년)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특수학교 등 지리적·사회적·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궁궐 문화 탐방·체험 프로그램 지속 진행
10. 검단신도시 사태 관련 원칙대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전용기 의원실 보고 완료('21년 10월) ○ (행정명령) 문화재청, 해당 건축물(19개 동, 1,373세대) 공사중지 명령('21.9.6.) ○ (현상변경) 건설사, 당초 설계안으로 현상변경 신청('21.8.4.) 및 철회(12.8., 12.23.) ○ (처분불복) 건설사,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9.14.) - (집행정지) 건설사 2심 승소로 공사 재개(12.10.), 문화재청 대법원 재항고(12.16.) - (본안소송)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 1심 판결 및 진행('21.9월~) * ('22.7.8)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사건 패소 / (7.22.) 항소 제기 * ('22.8.19) 대방건설 선고 예정 ○ (형사고발) 건설사 형사 고발(인천서부경찰서, '21.9.)
11. 검단신도시 사태 관련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정청래 의원실 보고 완료('21년 10월) ○ (행정명령) 문화재청, 해당 건축물(19개 동, 1,373세대) 공사중지 명령('21.9.6.) ○ (현상변경) 건설사, 당초 설계안으로 현상변경 신청('21.8.4.) 및 철회(12.8., 12.23.) ○ (처분불복) 건설사,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9.14.) - (집행정지) 건설사 2심 승소로 공사 재개(12.10.), 문화재청 대법원 재항고(12.16.) - (본안소송)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 1심 판결 및 진행('21.9월~) * ('22.7.8)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사건 패소 / (7.22.) 항소 제기 * ('22.8.19) 대방건설 선고 예정 ○ (형사고발) 건설사 형사 고발(인천서부경찰서, '21.9.)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2. 검단신도시 사태의 경관 훼손은 국제사회의 지적과 유네스코와 문화유산에서의 삭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됨. 사태의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 그리고 유네스코 지적에 대비한 대응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김예지 의원실 보고 완료('21년 10월) ○ 아파트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요청(유네스코→청/'21.11.3.) ○ 세계유산정책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방문하여 조선왕릉 현안 보고('21.11.23.) ○ 김포 장릉의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후속대책 관련, 유네스코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
13. 검단신도시 사태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차원에서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보완해 유사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함. 이후 진행과정을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이병훈 의원실 보고 완료('21년 10월) ○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세계유산영향평가 도입) 세계유산법 개정을 통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도입으로 세계유산 OUV의 선제적 보호체계 구축('22년~) - (규제정보 제공 개선) 문화재청 정보시스템(공간정보서비스)과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을 연계하여 문화재 규제정보 제공('22.3.~) - (관리역량 강화) 지자체 공무원 대상, 문화재 현상변경 이해교육 확대(사례중심, 반기별) 등 관리역량 제고('22년~)
14. 서울 태릉을 비롯한 조선왕릉 40기에 대한 완충구역의 적절한 보존지침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이채익 의원실 보고 완료('21.10월) ○ 조선왕릉 18개 클러스터 중 17개를 국가 직접 관리, 1개는 지방자치단체(영월 장릉, 강원도 영월군) 관리 중임. ○ 전체 18개 클러스터의 완충구역(Buffer Zone)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왕릉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건축 행위와 개발 행위,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고 있음.
15. 태릉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청와대 등 관련 기관과 또 국방부, 국토부와 서울시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조치사항> 완료** ○ 김승수 의원실 보고 완료('21.10월) ○ LH,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 중('22.1월～) - 국토부 업무협의('21.10.19.) - 착수보고회 실시('22.1.14./ LH, 국토부, 문화재청 참석) ○ 세계유산영향평가(HIA) 결과에 대하여 검토 실시('22.7월～)
16. 2017년도 현상변경 허가 기준 변경 고시 당시에 문화재청장, 관련 국장, 담당부서 직원들 명단과 그때 관계를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이병의원실 보고 완료('21.10월) ○ '17년 현상변경 허가기준 변경 고시 당시 직원 명단 - 나○○ 문화재청장(퇴직), 박○○ 차장(퇴직), 김○○ 문화재활용국장(現 문화체육관광부 근무), 조○○ 궁능문화재과장(퇴직), 이○○ 시설사무관(퇴직), 김○○ 주무관(現 수리기술과 근무) ○ 현상변경 허가기준 변경 관련 경과 - ('14. 8월) 택지개발 현상변경 허가신청(인천도시공사→김포시) - ('17. 1월) 김포 장릉주변 허용기준 조정(4-1구역 신설/높이20m이상 개별심의) * 허용기준 고시를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고시의 효력 유효함. - ('19. 3.) 인천시(서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허가 누락 - ('19. 12.~) 건설사(3곳) 분양 완료 및 공동주택 건설공사 착공 - ('21. 5.~) 무단 현상변경 최초 인지 후 공사중지 처분, 관련소송 진행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7. 한국사격진흥회와 김정민 씨의 체납된 변상금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한국사격진흥회]** ○ 2021년 변경된 현 대표이사(이용대)는 이전 대표이사에 의한 한국사격진흥회의 채무를 정리·변제하고 있으며 우리 청의 채권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납부 예정 - 2022.3월 : 한국사격진흥회, 2개년(2020~2021) 점유에 대한 변상금 납부 계획서 제출 / 문화재청, 2개년분 변상금 납부 고지 - 2022.5월 : 2개년분 변상금 징수 완료 (44백만원) **[김정민]** ○ 압류재산을 강제징수할 예정이며 공매절차 진행 중 - 2014년~2016년 : 미납 채권에 대해 소유 아파트 및 토지 압류 설정 - 2021.10월~11월 : 미납 채권에 대한 납부 재고지 및 독촉 - 2021.11월 : 2016년 압류 설정 이후 발생 채권에 대해 아파트 및 토지에 추가 압류 설정 - 2022.2월~4월 : 김정민의 변상금 관련 제기 민원 대응 · 민원 내용 : 무단점유 건물의 매수청구권 등 주장 및 매매대금으로 변상금 변제 상계 제안 - 2022.4월말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 의뢰 - 2022.5월~6월 :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에 설정된 권리분석 및 실익판단 - 2022.6월말~9월 :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해관계자에게 공매 대행 통지 등 공매 절차 진행 - 2022.9월~ : 공매 일시 중지 및 행정심판 진행 중 · 김정민, 행정심판 청구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직권 집행정지결정
18. 2015년에 작성된 용역보고서 '조선왕릉 복원계획'사본 제출할 것	**<조치사항> 완료** ○ 이채익 위원실 제출 완료('21.10.) - 세계유산 조선왕릉 보존·관리·활용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2015.12.)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 국외 소재 문화재의 기증 등 다양한 자발적 환수를 유도할 수 있는 환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조치사항> 완료** ○ 불법반출 의심 문화재 발견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심화 - 실태조사 추진 시 입수경위 분석 강화 등을 통한 반환 유도(클리블랜드미술관 <백자청화이기하묘지> 반환 '22.2.8) ○ 국외문화재 매입·기증 범위 확대를 위한 사장(死藏)문화재 발굴 - 다량소장자 조사, 경매 이력 조사를 통한 환수 데이터 구축 -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소장자 교섭을 통한 기증 유도 ○국외문화재 유공자 예우 사업 준비 및 추진 - 국외문화재 기증 환수 등 관련 유공자 전반을 대상으로 국내 초청행사 개최 및 홍보를 통해 국외문화재 보호·활용 인적 관리 ○ 우리문화재 국외 반출 관련 신규 자료 발굴 및 연구 대폭 확대('22년~) ○ 국외문화재 유공자 초청행사 개최 등 자발적 기증 환수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 초청행사: (기간)'22.7.5.~7.9. (대상)15대 심수관 외 1명(일본지역 거주) ○ 환수 추진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강화 - 국외문화재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속 지원 - 정부(문화재청·지자체)·재단·민간 등 환수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소통 활성화